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제 안 자	윤영철 의원
제안연월일	2015. 2. 9.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안연월일 : 2015. 2. 9.

제안자 : 윤영철 의원

찬성자 : 한성희 의원 외 21명

1. 제안이유

- 최근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음.
-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자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함.

2. 주 문

- 붙임 결의문과 같음
- 붙임 :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3. 건 의 처

- 대한민국국회(의장),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국회의원(김태환, 심학봉의원),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49.3%, 기업체 47.4%, 지역내 총생산 48.9%, 본사소재 1,000대기업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동안 정부가 수도권 과도집중과 국토의 기형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 자명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구미시의회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함께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여하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대상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완전히 제외 시켜야 한다.

1. 우리 구미시의회의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2월 9일

구미시의회의 의원 일동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
찬 성 명 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윤영철	윤영철	
김 상 조	김상조	
한 민 리	한민리	
임 호 자	임호자	
김 인 세	김인세	
심 소 석	심소석	
김 민 리	김민리	
김 재 상	김재상	
이 홍 기	이홍기	
이 공 자	이공자	
신성현	신성현	
김 익 수	김익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
찬 성 명 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정 교재		
정 라영	정 라영	
양 권은	양 권은	
한 주찬		
박 세진	박 세진	
김 지아	김 지아	
김 세진		
김 복자	김복자	
조기민		
정지현		
안 조자	안 조자	
정 동위		